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or.kr
2026년 11월 7일 발행

후원계좌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전국노동자대회 호외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악 좌절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한국의 수출액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1조 달러를 넘기는 것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네 번째다.

그러나 늘어나는 부만큼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올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4~7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8월에는 0.8퍼센트 증가했지만 여전히 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기업 지원을 우선하며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 규제 완화와 함께 영리병원 설립, 특권학교 설치 허용, 유해화학물질 명칭 은폐 허용 등 각종 친기업 개악 정책들이 포함될 것이다.

노동 개악도 추진한다. 상대적 고소득 연구·개발·전문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 적용과 휴게, 휴일, 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제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대상 확대·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각종 노동 개악이 망라된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에 전국에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한다.

사실 초광역특구법 추진 이전에도 정부의 노동 개혁 후퇴와 개악 추진은 이어져 왔다.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를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영업이익 N퍼센트 성과급 요구와 공장 신설과 같은 경영상 결정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노란봉투법에서 조금이나마 확대했던 파업권조차 후퇴시켰다.


대화 주제로 노동 개악 종합세트 내민 이재명

역대급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업 지원과 국방비는 크게 늘었지만,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과 복지 증가는 매우 부족하다. 지방정부에게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겨우 2퍼센트 늘어 지방정부가 제공하던 복지는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교부금도 제도를 개악해 증가 폭을 크게 줄이려 한다.

대화와 투쟁 병행?

정부의 계속된 개악 추진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자세가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정부가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는 민주당이 노동 개악 법안을 발의하며 노동계의 뒤통수를 쳤다.

10월 2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반칙이 반복된다면 퇴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노동 개악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가한다면 노동 개악에 들러리 서는 상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협상을 주요 업무로 하는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정부와 주고받기 타협을 논의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노동 개악은 일부 양보하더라도 정년 연장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타협이 지나치면 1998년 배석범 집행부의 노사정 합의 때처럼 노동자들에게 고통 전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시 배석범 집행부는 전교조 합법화를 받았다면서 정리해고제 법제화, 파견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 결과 전교조는 여전히 노동 3권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고용 불안정과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만약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공격하고, 추후 연금 개악 등을 더욱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경쟁력을 우선하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대화보다 투쟁을 우선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커져 가는 불만을 투쟁으로 표현하려 노력해야 한다.

▶ 2면으로 이어짐

▶ 1면에서 이어짐

파견 확대까지 추진 중

초광역특구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못지않게 위험한 내용이 파견 확대다.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파견법은 허용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묶여 있지만 정부는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고용 유연화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1998년 경제 위기 때 파견법이 제정됐다. 사용자는 임금과 고용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필요할 때 노동자를 쓰고, 버릴 수 있게 됐다.

손쉽게 쓰고 버리기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등은 파견이 금지돼 왔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등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벌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싸워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 단체들은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확대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도 노동 개악의 한 의제로 파견 확대를 추진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서 파견을 확대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주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특구 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파견이 허용되면 역차별 운운하며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라는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주 52시간 예외뿐 아니라 파견 확대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장시간 노동·비정규직 확대 멈춰라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직무급제는 '동일임금' 탈을 쓴 임금 억제책

정부는 12월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무별 임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직무급제를 강화하려 한다. 동일임금을 주려면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가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를 위해 오랜 기간 제기돼 온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여성·청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 정부 들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또,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기간제와 파견제 등을 더욱 늘리려 한다. 한쪽으로는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다른 쪽으로는 동일임금을 말하는 정부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

직무급제의 본질은 임금 억제다. 고령화로 임금 부담이 커지자 기업주들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허물고 싶어 한다.

이것은 여성이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직무급제가 도입된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지난 수십 년간 더 심화됐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적용된 직무급제는 평생 저임금을 고착시켰다.

저임금에 묶어 두기

노동조합의 교섭전문가층(지도층)은 상층 간부의 일부는 직무급제를 임금 차별의 대안으로 검토하며 정부와의 협상 대상으로 여겨 왔다.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정년연장 TF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가해 왔고, 지난해 이 TF에서 정년 연장의 대가로 "업종별 직무급제"를 노사 자율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금 억제를 목적으로 한 직무급제를 노조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격차 해소의 진정한 동력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는 사용자들에 맞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때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임금 인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

직무급제는 초광역특구법과 함께 저지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악이다.

배척(과 표현물 반포 금지)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집행부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노동자연대 배척에 관해 노조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글

이 글을 노조 활동가들에게 쓴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의 결정을 집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누구와 집회를 함께 열 수 있고 누구와는 안 되는지, 어느 단체 회원이 파업 지원에 나타나면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위에서 정해 내려보낸 결정이다. 그 결정의 근거 문서를 여러분이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하 전진)이 그 결정을 가장 열심히 옹호하는 것도, 결정에 의문을 품는 사람에게까지 비난을 넘어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것도 봤을 것이다.

이 글의 요지는 단순하다. 여러분은 그 결정을 집행하기 전에 물을 권리가 있고,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운동의 단결은 서로에게 도덕적 무결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착취와 차별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견해를 지닌 채 공동의 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도덕적 비난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과 조직을 무기한 추방해서도 안 된다.

무기한 추방

판단의 기준은 하나다. 전진에도, 민주노총 중앙 집행 기구(여성위원회 포함)에도, 노동자연대를 포함한 어느 단체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사회주의적 명칭도,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차별에 반대한다는 자기소개도 배척 권력의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명분의 고결함이 아니라 실제의 방법, 입증의 수준, 책임의 범위, 그리고 그 방법이 노동자들의 행동 능력에 미치는 효과다.



노동운동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온다

운동의 단결은 서로에게 도덕적 무결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착취와 차별에 맞서려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견해를 지닌 채 공동의 힘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1. 분노는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성차별에 대한 분노, 폭력에 대한 항의는 해방운동의 동력이다. 그러나 분노가 판단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에서 판단을 끝내 버리는 권위로 바뀔 때 문제가 생긴다. 분노의 강도가 증거의 강도를 대신하고, 비난의 격렬함이 제재의 적절함을 대신하며, 반대편을 얼마나 멀리 밀어냈는지가 실천의 성과를 대신하게 된다.

도덕주의는 틀린 말을 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참인 판단도 맥락을 도외시해 버리는 방식,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는 판단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속한 단체 전체, 그 단체와 연대한 사람 모두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개인의 행위에서 단체의 책임으로, 단체의 책임에서 제삼자의 책임으로 넘어갈 때마다 독자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배척 정치가 교묘한 것은 이 간극을 숨기기 때문이다. 제재의 범위를 묻는 사람에게 최초의 잘못을 되풀이해서 제시한다. 그러나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한 배척 조치가 그 잘못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주장은 다르다. 활동가가 “정확히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배제하라는 것인가” 하고 물을 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느냐”로 답하는 사람은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다. 논쟁해야 할 지점을 봉쇄한 것이다.

▶ 4면으로 이어짐

▶ 3면에서 이어짐

2. 목적과 수단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썼다. 사회관계의 변화를 개인의 선함에 대한 훈계로 대체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동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강제되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서로 이기적이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은 무력하다. 연대는 설교가 아니라 공동 행동 속에서 물질적 기반을 얻는다. 운동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동행동 능력 약화

"목적이 좋으면 무슨 수단이든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맞세우는 것, 대중이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믿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대중을 기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해방이 목적일진대 해방의 주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은 그 목적과 충돌한다.

이 기준으로 배척 정치를 판단하면 쟁점은 분명해진다. 이 조치는 노동자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는가? 아니면 일부의 결정에 복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게 하며, 낙인을 피하려는 침묵과 추종을 낳는가? 정보가 일부에게 독점되고 활동가는 결론만 전달받는다면 활동가는 결정을 평가할 수 없다. 반대 근거가 차단되고 이견을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의심받는다면 잘못된 결정을 고칠 방법도 없다. 이 같은 기준은 은폐와 배척을 모두 비판한다. 조직의 체면을 위해 문제를 덮는 것도, 충분한 근거와 절차 없이 특정 세력을 추방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대리주의다. 둘 다 집행부가 대중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중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4년 민주노총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연대 회원들

3. 도덕적 인증이 아닌 공동의 능력으로서의 단결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공동전선의 원리를 매일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성격, 선거 전략,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태도에서 대립하는 정파들이 해고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는 함께 선다. 합의의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협력도 가능하고 비판도 가능하다. 도덕주의적 배척은 이 범위를 무너뜨린다.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포괄적인 정치적 동의로 간주하고,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에서 공모를 추론한다. 공동전선은 실천의 합의에서 순결성의 합의로 변질된다.

배척의 대가는 추상적이지 않다. 일터 앞 농성에 나와 줄 사람, 연대 집회에 참가할 사람, 선전물을 함께 만들 사람이 줄어든다. 조직할 시간이 관계의 적절성을 해명하는 데 쓰인다. 다른 정치를 가진 사람과 함께 행동하며 자기 주장을 검증받을 기회도 줄어든다.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분류될지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그 결과 토론의 질은 낮아지고, 이는 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상대의 본질을 악하다고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공동 행동이 필요해져도 돌아설 길이 좁아진다. 이처럼 대가가 명백한 이상, 배척을 주도하는 쪽은 조치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도덕주의는 어디서 생기는가

비난 경쟁: 가혹하게 비난할 때만 발언권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그 보상 체계에 맞는 언어를 익힌다. 첫 발언자가 철회를 요구하면 다음은 공개 사과를, 그다음은 활동 중지를, 그다음은 단체 전체와의 절연을 요구한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커진 것은 정의가 아니라 비난 경쟁의 판돈이다. 비례성을 묻는 사람은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는 의심을 받고, 회의는 최선의 대응을 찾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덜 의심받을 입장을 고르는 장소가 된다. 사회주의 조직이 노조 관료 기구보다 더 단호해 보이려 할 때, 단호함의 내용은 더 넓은 배제, 더 긴 기간, 더 엄격한 접촉 금지일 수밖에 없다.

무력감의 보상: 여성위 등 노조 중앙기구 구성원의 도덕주의는 사회 변혁 전망의 상실이 낳은 증상일 수 있다. 일터의 성차별적 노동조건과 노조 안의 성별 불평등을 바꾸는 일은 어렵고 오래 걸린다. 반면 특정 단체를 집회에서 몰아내는 일은 쉽고 비교적 빨리 성공한다. 운동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기보다 이미 가진 작은 힘을 행사해 결과를 내세우는 데 익숙해진다.

반(反)정치: 도덕주의는 '반정치'다. 도덕주의는 대화하거나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며, 오히려 금지와 비난을 통해 대화를 중단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중앙 집행부와 여성위, 그리고 전진이 노동자연대를 상대로 하는 일의 정확한 묘사다. 여성위와 전진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논쟁 자체를 '2차 가해'로 만



연좌제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는 이유로 질병판정위원 해촉 추진 강행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항의하는 김승섭 노무사와 지지자들

들어 중단시키려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해 온 질서에 대한 비판에서 태어난 개념이다. 그 개념이 자신에 대한 모든 질문을 금지하는 데 쓰인다면 자신의 기원을 배반하는 것이다.

악마화: 상대를 악의 담지자로 만드는 일에는 폐해가 뒤따른다. 악마화는 악을 특정한 사람, 집단, 지역에 집중시킬 뿐 아니라, 다른 곳,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악의 작용을 흐린다. '2차 가해 단체'라는 낙인이 한 조직에 집중될수록, 자기 기구와 자기 정파 안의 성차별과 권한 남용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노동자연대가 내일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자. 그때 여성위와 전진은 현장의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답이 지금의 배척 캠페인과 무관하다면, 배척은 애초에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다.

5. 비판의 권리와 처벌의 권한

성폭력은 중대한 잘못이다. 여성위와 전진이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운동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비판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처벌의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타인의 나쁜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과 기구의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

도덕을 하나의 법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집행관으로 만든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원한을 법의 목소리로 오해하도록 부추긴다. 한 단체의 주장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자, 어느 집회의 주최자든 어느 노조의 간부든 노동자연대 회원을 집회장이나 현장 어디서든 '체포'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 정파적 경쟁에서 느끼는 반감, 상대 조직의 성장에 대한 경계심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잘못은 그 감정을 '피해자 보호'의 명령으로 오해하고 타인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6. 활동가가 어떤 기구에든 요구해야 할 기준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다"는 옳은 명분이 "그러므로 피해자의 설명에 일절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로 비약할 수는 없다.

'2차 가해'는 구체적 행위를 가리켜야 하는데, 정당한 의문까지 틀어막는 데 쓰인다면 동의를 강요하는 무기가 된다. 운동사회의 경험이 이미 이를 보여 줬다.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는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에 진실의 권위를 부여하고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생겼고, 이는 여성운동 활동가 일부의 반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7년 민주노총 여성위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선언했다. 계기는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사건'이었다. 여성위가 그 가해혐의자에게 양심에 반한 성폭행 자술을 종용한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 1·2심 무죄로 귀결된 사건이다. 노동자연대 기자가 이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의 패착 사례로 제시하자,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가 '2차 가해'를 했다며 연대를 끊었다. 지금 집행하라고 내려온 결정은 논쟁 자체를 가해로 규정하는 오래된 논리에서 나왔다.

잘못된 정보로 누군가를 부당하게 내쫓았다면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내 의도는 선했다"는 변명이 그 책임을 덮어주지 않는다.

운동은 선행(善行)과 다르다. 왜냐하면 운동은 주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페미니즘도 여성을 피해자화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노동운동도 노동자를 피해자화해서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박경신, '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문학동네》 통권 95호, 2018년 6월)


여성노동자 조건 개선, 배척으론 안 된다 투쟁하는 코레일 자회사 여성 노동자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속한 단체, 그 단체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 그 단체와 연대한 노조까지 결백을 해명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다. 활동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압력이 바로 이것이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가 아니라, 노동자연대 회원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가 심사받고 있다.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7. 관료 권력과 도덕주의의 결합

활동가라면 누구나 알듯, 노조 관료 기구는 종종 현장의 전투성을 관리하고 파업을 봉합하며 비판적 조합원을 고립시키기도 한다. 평소 파업에서는 집행부의 결정을 비판할 자유를 외치면서, 특정 단체를 쫓아낼 때는 "공식 결정이니 묻지 말고 집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집행부의 권력이 내 경쟁자를 내칠 때만 미덥게 보인다면 그것은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파의 이익이다.**



민주노총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판매를 금지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항의하는 조합원들

이것은 전진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주의 조직이 노조 관료 기구의 행정적 권한을 빌려 경쟁 정파를 현장과 집회장에서 축출하는 일은 전술적 과오가 아니다. 노동계급 자주성이라는 사회주의 정치의 근본과 충돌한다. 어떤 선택지는 애초에 검토 대상에서 빠져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 조직에 '노조 관료 기구의 징계권으로 경쟁 정파를 제거한다'는 선택지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

좌파 단체는 배제를 정당화할 도덕적 명분을 대주고, 노조 관료 기구는 그 명분을 무기 삼아 행정적 징계를 내린다. 이 결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전진도 민주노총 집행부도 아니다. 연대할 사람을 잃고, 질문할 자유를 잃고, 다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떠안는 활동가들이다.

1938년 멕시코노동조합총연맹(CTM) 지도자 롬바르도 톨레다노가 반동적 언론을 검열하거나 아예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에 맞서 이렇게 경고했다. "오늘은 정부가 노동자 조직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이면 정부는 부르주아지 가운데 가장 반동적인 분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억압적 법률이 노동자들을 겨냥해 사용될 것이다."

반동 언론에 맞서는 길조차 국가의 금지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언론과 조직을 통한 투쟁이다. 하물며 노동운동 안의 경쟁 정파를 대하는 원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집행부가 바뀌고 투쟁적 좌파가 다음 '2차 가해자'로 지목될 때, 전진은 자신이 세운 선례를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공식 결정은 현장의 비공식 관계망을 타고 집행된다. 어느 단체 회원이 집회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귀띔, 공동 성명에 대한 '우려' 전달, 섭외 명단에 대한 사후 항의, 그 배경의 "당신도 같은 편이냐"는 무언의 질문. 물리적 강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결과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평판의 훼손, 정보의 차단, 행사에서의 배제는 활동 능력에 치명적이다. 직함 없는 '도덕적 권위'의 권력도 비판의 대상이다.

8. 활동가들이 민주노총 집행부와 전진에 물어야 할 것

전진과 민주노총 집행부는 도덕적 명분을 반복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답해야 한다.

1. 근거: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는 무엇이며, 그것이 '2차 가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비판하는 행위와 요구하는 제재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무엇인가?

2. 범위: 왜 조직의 책임이 그 조직과 연대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로 확장돼야 하는가?

3. 기한과 해제 조건: 제재는 언제까지인가? 2017년에 시작된 '연대 중단'은 아무런 재검토 없이 햇수를 더해 가고 있다. '연대 중단'의 근거로 제시된 노동자연대에 관한 핵심 비난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로 판결돼 확정됐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이례적 조치가 아니라 관료적 독점의 일상이다.

4. 일관성: 같은 기준을 자기 기구의 사건에도 적용하는가? 누가 적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때로는 자기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기준인가?

5. 효과: 이 배척이 여성 노동자의 실제 조건을 바꾸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가? 배척이 현장의 성폭력을 실제로 줄였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맺으며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무결점을 인증받은 소수만의 도덕적 순혈 공동체가 아니다. 착취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공동 통제하는 사회다. 그 세계를 만들어 갈 주체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억압과 편견의 진흙탕 속에서 투쟁하고 연대하며 한계를 돌파해 내는 사람들이다. 성폭력 없는 노동운동을 위해 싸우는 것은 도덕주의가 아니다. 그 대의명분으로 사실 확인, 비례성, 소명 기회, 정정의 통로를 경멸하는 것이 도덕주의다.

엄격함은 중요한 무기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엄격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엄격하며, 동지의 입을 틀어막는 관행에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인을 배제하려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가장 엄격해야 한다. 상대를 쫓아낸 횟수나 연대의 고리를 끊어 낸 횟수는 해방운동의 훈장이 될 수 없다. 운동의 진정한 채점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할 힘을 가졌는가,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게 됐는가, 이질적인 존재들이 공통의 요구를 위해 어깨를 걸게 됐는가, 그리고 조직의 그릇된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게 됐는가에 달려 있다.

활동가 여러분에게 이 글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연대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집행하라고 내려온 결정의 근거와 결과, 책임성에 대해 물으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지금 운동에 절실한 것은 자신들만이 정의롭다는 환상을 메아리처럼 주고받는 좁은 온실이 아니라, 자본의 착취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 넓고 강력한 공동의 역량이다.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애먼 이주민 희생양 삼는 이재명

이재명이 연이어 이주민 비난 망언을 했다.

10월 27일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다음 날 엑스(옛 트위터)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다문화가족 비난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이재명이 동조한 "내국인 역차별" 주장은 극우들이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며 애용하는 논리다.

올해 5월 이재명은 혐오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재명의 엑스 계정부터 폐쇄해야 할 판이다.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대중투쟁 덕분에 부상한 이재명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약속했지만, 무엇 하나 단호하고 속 시원하게 추진한 게 없다. 노동개악 종합세트 메가특구특별법, 이란 전쟁 파병 추진 등 배신 목록만 늘고 있다.

이재명의 '중도우파 외연 확장', '중도 실용주의'는 이런 배신의 정치적 표현이다. 이번 이주민 비난 망언들은 그 연장선이다. 특히, 극우의 배외주의 선동을 정당화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키우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아주 고약하다.

이재명이 우파의 의제를 수용할수록 국민의힘 등 우파는 사기와 자신감이 오르고 개혁 염원층은 실망과 환멸로 돌아설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내국인 '역차별'?

이재명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반드시 저소득층은 아닐 수 있다며, 어린이집과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내국인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은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 성격이다. 결혼이주민(다수는 여성이다)은 부모 등 친인척이 대부분 본국에 있어서 돌봄에 대한 도움을 청할 사람이 내국인가족에 비해 적고, 불안정한 체류 자격 때문에 차별과 편견에 시달린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공공 산후조리원을 신설하려다 박근혜와 충돌했었다. 그런데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에 대한 불만을 이주민에게 돌리고 있다. 무상급식을 없애려다 '셀프 탄핵' 당했던 오세훈이 재빨리 화답한 이유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군비는 늘리고 메가특구 등 기업 지원에는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복지를 대폭 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저임금과 체불, 브로커 비용으로 고통받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

이주노동자 본국 송금, 한국 경제에 도움 안 돼?

임금은 (이주)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한국인) 사용자가 가져가고, 그것이 이윤의 원천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임금을 어디에 쓰든 그것은 노동자의 자유다. 다수 이주노동자들이 가족을 데려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막아 온 정부가 가족 송금을 타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진정한 문제는 이주노동자냐 내국인 노동자냐가 아니라, 계급 불평등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노랑봉투법 줬다 뺐기 등 개혁 염원을 배신해 왔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 몫'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41.1퍼센트로 2010년 이후 최저였다.

그래 놓고 이주노동자의 송금을 문제 삼는 것은 고물가, 생활고,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이주민 혐오를 정상 담론으로 만드는 이재명
★ 세계 항만 노동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
★ 메가프로젝트
★ 노동자 투쟁
·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 이란 파병 반대 교사 서명 운동
· 해고에 항의하는 대구 코웨이 여성 노동자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ws.or.kr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노동자 연대 ws.or.kr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ws.or.kr/subs2





11월 6일 청와대 앞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기자회견

청해부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다!

이란 전쟁 반대, 파병 반대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청해부대 파병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원유 수입 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조선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사이의 절충안"(〈한겨레〉)이라며 이 결정을 옹호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 수입이 막히게 된 것은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이란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이란에 대한 봉쇄와 폭격, 제재를 반복하고 또 매번 실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안은 그런 트럼프의 전쟁을 돕겠다는 것이다. "역내 안정"은커녕 방화범에게 휘발유를 제공하는 격이다.

또한 정부의 파병안은 절충이 아니라 미군의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초계기는 미국의 이란 봉쇄에서 핵심 과제인 감시 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청해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해 연합 함대 CTF-153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번에 파견되는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 역시 CTF-153를 통해 이란에 맞서는 미국의 제5함대로 공유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이 초계기는 지부티의 미군 기지를 기항지로 쓰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군함이 꼭 포를 쏘지 않더라도 상대국 인근 해역에 바짝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무력 시위라는 것은 군사교본에도 나온다. 4,400톤급 구축함, 잠수함 킬러라는 초계기, 호르무즈 해협처럼 수심 얕은 바다에 특화된 무인 잠수정과 폭발물 처리반을 대동한다면 삼척동자도 그 의도를 알 것이다.

언론은 국방부가 밝힌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지도로 표시하며 마치 이란 전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유도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오만의 두큼항은 미국의 핵심 보급항이고, 이번 전쟁 기간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최소한 3번 이상 받았다(연료 창고, 미 항공모함 급유·보급 시설). 청해부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쟁터로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오만의 두큼항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회 동의 절차도 건너뛴 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해협 쪽으로 군함을 전진시킨 바 있다.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다음 번 군사적 요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또한 국방부는 종전 후 영국·프랑스와의 연합 작전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강요에 따른 파병'이 아닌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파병은 괜찮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중립이 아니다. 전쟁 첫날부터 이란을 비난하고, 미국의 침략 명분인 핵무기 비확산이 중요한 가치라며 사실상 미국을 지지했다. 미군의 이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 폭격에 대해 규탄 한마디 없었다.(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제공한 기지에서는 이란 폭격과 전쟁 물자 운반을 위한 미군 전투기·수송기 등이 5,000번 넘게 발진했다.

이란은 유럽을 "외세"라 부르며 결코 환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왔다.

"외세가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군함을 파견·주둔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위기 격화와 항로의 군사화다."(5월 10일 영·프가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계획을 밝힌 직후 이란 외무부 차관의 반응)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파병, 즉 전쟁 관여를 착착 준비하면서도 "전쟁 개입은 없다", "결정된 것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청와대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서도 '결정된 것 없다'는 형식적 답변을 반복했다.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표결해 '토론할 게 남아있지 않은 사안'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3일 주한 오만 대사를 만나, 청해부대의 군수품 보급·선박 호송 등의 임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서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바깥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거리에서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파병에 반대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



이란 전쟁 파병 반대
4차 집회 행진

일시: 11월 1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도심 (추후 공지)
주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문의 : 010-7550-2131

구체적 집회 장소 등은 향후 SNS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검색
인스타그램: @nokoreantroops